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8445 |
|----------|------|

발의연월일 : 2025. 2. 26.

발 의 자 : 정성호 · 추미애 · 한민수  
황 희 · 김병기 · 윤호중  
황정아 · 윤종균 · 임광현  
박홍배 · 노종면 · 이훈기  
이수진 · 김문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5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보칙

제5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제14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의2제3항·

제5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로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2. 범죄행위의 기간 및 횟수, 반포등의 규모와 피해의 회복가능성
3.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5. 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상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br><br><u>&lt;신    설&gt;</u> | <u>제5장 보칙</u><br><u>제5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제14조제3항 · 제5항 및 제14조의2 제3항 · 제5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로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u><br><u>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br><u>1.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u><br><u>2. 범죄행위의 기간 및 횟수, 반포등의 규모와 피해의 회복가능성</u><br><u>3.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u><br><u>4. 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u><br><u>5. 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상태</u> |